

# “초광역화 전략 부재... 대책 시급”

조동용 도의원, “민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 발표내용에 전북 상대적 소외, 도 대응 미비에 따른 결과 도 차원 전담조직·TF 꾸려서라도 체계적 대응 추진을”



회에 대한 전북의 대응전략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사실상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하고, 전북과 강원은 전국 광역자치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들이다”며 “그나마 강원은 서울·경기와 인접해 수도권 영향권에 있지만, 전북은 그야말로 완전히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산업구조변화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별 초광역화에 대한 언급과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최근에서야 2개월짜리 전략 마련 용역을 전북연구원에 맡겨놓았을 뿐이다”라며 “그동안 별도의 전담조직은 커녕 초광역화 대응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전략 마련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전담조직이나 TF를 꾸려서라도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추진단의 발표내용에 전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은 전북도 대응 미비에 따른 결과라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2+3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내용에서 전북은 강

소권 메가시티로의 육성을 언급했지만, 사실상 그랜드 메가시티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와는 규모와 효과 면에서 완전히 다르며, 전북의 강소권 메가시티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전략이 아닌 끼워 넣기 식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초광역



민주 '당·정·광역단체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 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해직·임용제외 교원 지위 완전 원상회복을

이병도 도의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 민주화·참교육 실현 앞장 해직·임용제외 교원들의 불이익 해소돼야”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3)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섰던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사학·사회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돼 특별채용 되었거나,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을 말한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북지역 99명을 포함한 1,800여명의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은 해직 및 임용 제외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박탈당하고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라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도 의원은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해직교원과 임용제외교원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17일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공동으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유호상 기자



### 문승우·이명연 도의원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전북도의회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군산4),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이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에서 수여하는 '2020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매진하고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다양한 입법활동과 도정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타협과 상생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한옥마을 관광트램 건설 법적 근거 마련한다

민주 김윤덕 의원 도입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본격적으로 '한옥마을 관광트램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14일 한옥마을 트램 도입을 위해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케도운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노면전차에 관해 도로에서 케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로 정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관광수단으로서의 노면

전차의 효용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에서 관광할 트램을 운행할 경우 지역 특성상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 노면전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혼용차로를 운행할 필요가 있어 노면전차의 범위에 대해 새로이 정의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이 발의된 '케도운송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에는 케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케도시설과 케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운송 체계가 케도에 포함되는

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케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에는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케도운송법'에 따른 케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케도의 정의에 케이블 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케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한옥마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규정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트램을 비롯한 노면전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 마련을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트램 도입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아이 돌봄 지자체 책임 확대해야”

나인권 도의원 촉구



전북도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 2)은 지난 14일 제 37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의 지자체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은 "전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인구절벽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낳고 돌보는 일에 걱정 없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의 지자체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휴원 및 휴교가 증가해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음에도, 현행 서비스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경제체제 상황에서 비용적인 부담까지 가중돼 올해 예산액이 지난 2018년 대비 2배 증가해도 이용률은 제자리걸음

이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연간 최대 720시간의 시간제한으로, 이용시간 대가 출·퇴근시간에 몰리고 해당시간에만 아이 돌보미가 필요하다보니 수요불균형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전북도가 현행 소득기준별로 차등으로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비용을 경감시켜주고, 이용시간을 최대 1,200시간으로 확대하며, 수요자 맞춤형 질 높은 공공아이돌봄센터를 확충하고 타 시·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 “국가 균형발전 역행’ 현행 재정분권 변경을”

도의회, 두세훈 도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재정자립도 낮은 9개 광역자치단체 세입 감소 2023년부터 신규·계속사업 중단 불가피”



전북도의회가 15일 제 2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제5차 본회의에서 황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 필요'를 통해 종량제 봉투 및 무선전자제거 중량기 사용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발생과 그 해결방안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혜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698억2,554만1,000원으로 확정됐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733억6,274만4,000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도 본예산은 39개 항목 82억 8,676만원이 삭감돼 총 9,116억6,329만19천원으로 확정, 전년 대비 6억2,353만19천원이 증액됐다. /정유=김대환 기자

를 10% 인상해 조성한 8.7조를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회계 3.6조원을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추가로 조성한 지방소비세 8.7조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17개 시·도에 배분하고, 지방에 이양된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3.6조를 지방소비세 8.7조에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하는 데 있다. 이대로라면,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 기한이 종료된 후 2023년부터는 지방재정분권 전에 비해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는 매년 서울 4,349억원, 경기 2,422억원, 부산 1,762억원, 대구 1,171억원에 이르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전북 2,239억원, 전남 4,263억

원, 경북 1,796억원, 강원 1,055억원의 세입이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두 의원은 "재정분권으로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광역자치단체는 세입이 오히려 감소해 2023년부터는 균특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두 의원은 "현행 지방재정분권 정책이 17개 시·도의 세입이 재정분권 전보다 증가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방향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균특 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균형 있는 지방재정분권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과 12월에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는 '세종시특별법개정안'과 창원시 통합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호상 기자

## “의료인 처우 개선, 전북도가 나서야”

강용구 도의원 주장



코로나19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동고동락한 전우'가 생긴 의료진 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던 정부가 지급한 의료인 수당에 전북도가 나서 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정부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는 100% 수당을,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에게는 70% 상당의 수당을, 기타 직접 방역 인력에는 50%의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고, 수당 대상자를 파악·지급한 것은 전북도였다. 특히,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 지난 2월부터 타 시도의 코로나19 환자를 받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2019년도 손익 비교했을 때 200여 명이 넘는 손해를 입었기에 정부와 전북도의 지침을 잘 따른 결과로 손해와 사기 저하라는 결과를 낳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남원 2)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위 '코로나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이 2차례에 걸쳐 직종과 차등 지급됐고, 일부 비

정규직과 비의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강용구 의원은 "직군별 업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병원 안에서 코로나 19와 함께 싸웠던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5분자유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도내 5곳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직종 간 다른 비율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과정에서 차등지급의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관련 사안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면서 "정부의 지침이 미비하다면, 도내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그것을 보완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면서 관련 수당으로 인한 일부 의료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전북도를 질타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